

주간 통일정세

2016-48

Contents

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 개요

분류	일자	
정치	11.26	北김정은, 산악보병부대 스키훈련 참관...이달 일곱 번째 軍시찰(연합뉴스)
	11.27	北 김정은, 쿠바 카스트로 사망에 조전(연합뉴스)
		北 국가가격위원회 위원장 교체...량의경→최강(연합뉴스) “북한 내년 달력에도 김정은 생일 명절로 표기 안돼”(연합뉴스)
	11.28	北김정은, 삼지연군 찾아 김정일 추모...“인민낙원 염원 이뤄야”(연합뉴스)
		北 최룡해, 카스트로 조문차 출국(연합뉴스)
		北 지도부, 카스트로 타계에 쿠바대사관 찾아 조의(연합뉴스) 北, 카스트로 사망에 28~30일 애도기간(연합뉴스)
	11.29	김명국 北 인민군 대장 사망...김정은, 화환 보내(연합뉴스)
		北 김정은, 쿠바대사관 직접 찾아 카스트로 사망에 조의(연합뉴스)
	12.1	최룡해 이끄는 北대표단, 사망한 카스트로에 조의(연합뉴스)
		“독일주재 北대사 곧 교체...‘삼수’끝 후임자 승인”(연합뉴스)
		“北 조평통 위원장에 리선권 국방위 정책국장...김영철 오른팔”(연합뉴스) 北, 김정일 5주기 앞두고 추모 분위기 시동(연합뉴스)
	12.2	김정은, 서울겨냥 포사격훈련 지도...“남조선 것들 쓸어버려야”(연합뉴스)
北, 김정은 지휘 대규모 포사격훈련 사진 20장 공개(연합뉴스) “北 수해복구 열차 전복돼 300여명 사상”(연합뉴스)		
경제	11.28	北, 여행제한 완화로 관광객 끌기 ‘안간힘’...유커 방문 증가세(연합뉴스)
	11.30	“10월 북한 對中 석탄 수출액, 작년 대비 70% 증가”(연합뉴스)
	12.1	‘대북제재 무색’ 북중 무역액 3년 만에 증가세(연합뉴스)
사회 문화	11.26	‘그 많던 꽃제비 어디갔나’...北 나선시 꽃제비 추방설(연합뉴스)
	11.28	“北 어업권 판매로 어획량 줄자 어민들 강도 행위도”(연합뉴스)
	11.30	“北, 수해지역 노동력 보충 위해 노숙자·방랑자 이주”(연합뉴스)
	12.1	北인권단체 “北서 마약 일상화...주민의 최소 30% 소비”(연합뉴스)
		“北 수해복구 열차 전복돼 300여명 사상”(연합뉴스)
12.2	北, ‘반국가범죄·총기소지자 신고하라’ 공고문(연합뉴스)	
외교 국방	11.26	IMO “예고없는 北미사일발사 심각한 우려”...북한 명시해 비판(연합뉴스)
		유엔, 北수출 1/4에 타격, 9천400억원 규모 제재안...석탄수출 타깃(연합뉴스)

11.27	日정부, 미사일방어 강화에 1조9천억원 추가투입...北미사일 대비(연합뉴스)
	이상덕 주싱가포르대사 "싱가포르 비자조치, 北활동 상당 제약"(연합뉴스)
11.28	北, 무력사용 확대된 日자위대에 "무모한 군국주의 부활"(연합뉴스)
	인니 아세안 국장 "남북 간 중요한 역할 저버리지 않을 것"(연합뉴스)
11.29	"중국, 열차 통해서도 北에 연료 공급"(연합뉴스)
	안보리, 30일 대북 제재안 채택 예고...‘북한정권 자금줄 봉쇄’(연합뉴스) "안보리 대북결의안 2270호 이행보고서 제출한 나라 70개 육박"(연합뉴스)
11.30	<유엔 대북제재> 日, 독자제재 곧 결정...인적왕래 규제 확대(연합뉴스)
	러 외무부, 안보리 대북 결의 입장 표명 유보...“검토 중”(연합뉴스)
	<유엔 대북제재> ‘블랙리스트’ 누가 올랐나...北현직대사 첫 포함(연합뉴스) 北, 12월 1일 동계훈련 돌입...“김정은, 실전수준 강화 지시”(연합뉴스)
12.1	<유엔 대북제재> 美, 독자제재 강화...세컨더리보이콧 확대 주목(연합뉴스)
	<유엔 대북제재> 美백악관 “北에 실질적인 압박될 것”(연합뉴스)
	중국, 북핵 문제 6자 회담 재개로 해결해야(연합뉴스)
	<유엔 대북제재> EU, 독자 대북 제재 논의 본격화할 듯(연합뉴스)
	<유엔 대북제재> 北대표부 “차별적 이중적 불공평 제재 인정 안해”(연합뉴스)
	안보리, 새 대북제재 만장일치 결의...석탄·광물수출 정조준(연합뉴스) 北, 유엔 안보리 2321호 채택에 “전면 배격” 반발(연합뉴스)
12.2	주유엔 美대사 “새 대북제재, 北변화 요인될 것”(연합뉴스)
	日 대북 독자제재 확대...아베 “납치·핵·미사일 포괄해결”(연합뉴스) 안보리 새 대북제재, “기존 2270호 구명 제대로 메워 효과 클것”(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정치

가. 김정은 동향

2016. 11. 26.

■ 北김정은, 산악보병부대 스키훈련 참관…이달 일곱 번째 군사찰(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이달 들어 일곱 번째 군부대를 시찰함.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6일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1045군부대 관하 산악보병대대의 스키훈련을 지도하시였다”면서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 동지가 훈련을 보았다”고 보도함.
- 김정은은 “현대전의 요구와 공격 및 방어 작전지대의 특성에 맞게 산악보병훈련의 형식과 방법을 질적으로 부단히 개선하고 실전적 훈련에 대한 요구성을 최대한으로 높여 군인들의 사격술과 산악극복 및 산악행군능력, 습격능력과 야전 생존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함.

2016. 11. 27.

■ 北 김정은, 쿠바 카스트로 사망에 조전(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26일 90세를 일기로 사망한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 앞으로 조전(弔電)을 보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함.
- 김정은은 당 위원장과 국무위원회 위원장, 인민군 최고사령관 명의의 조전에서 “나는 쿠바혁명의 최고지도자 카스트로 동지가 뜻밖에 서거하였다는 슬픈 소식에 접하여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쿠바당과 정부와 인민과 고인의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힘.
- 김정은은 카스트로에 대해 “사회주의와 정의를 위한 반제자주위업수행에 특출한 공헌을 한 저명한 정치활동가였다”고 평가하면서 “혁명적 쿠바 인민이 카스트로 동지의 생전의 뜻을 받들어 부강번영하는 인민의 이상사회 건설과 사회주의 위업의 승리를 반드시 이룩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고 강조함.

2016. 11. 28.

■ 北김정은, 삼지연군 찾아 김정일 추모…“인민낙원 염원 이뤄야”(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출생지로 북한이 선전하는 양강도 삼지연군을 방문했다고 북한 관영매체가 28일 보도함.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삼지연군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며 김정은이 삼지연군에 건립된 김정일 동상을 참배했다고 밝힘.
- 통신은 김정은이 “우리 장군님(김정일)께서 한평생 높이 추켜드시였던 혁명의 붉은 기를 절대로 놓지 말고 장군님의 염원대로 이 땅에 부강 번영하는 인민의 낙원, 사회주의 강대국을 반드시 일떠세우자”고 말했다고 보도함.

2016. 11. 29.

■ **김명국 北 인민군 대장 사망…김정은, 화환 보내(연합뉴스)**

- 김명국(76) 북한 인민군 육군 대장이 사망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28일 화환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중앙통신은 구체적인 사망 시점을 밝히지 않고 “김정은 동지께서는 김일성훈장, 김정일훈장 수훈자인 조선인민군 육군 대장 김명국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28일 고인의 영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고 짚막하게 전함.
- 김일성군사종합대학과 총참모부 작전국 출신인 김명국은 작전국장으로 활동하던 1995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택을 찾아갈 정도로 두터운 신임을 받음.

■ **北 김정은, 쿠바대사관 직접 찾아 카스트로 사망에 조의(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북한 주재 쿠바 대사관을 직접 방문해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의 사망에 애도를 표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함.
- 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쿠바 혁명의 최고지도자 피델 카스트로 루스 동지의 서거에 즈음하여 11월 28일 우리나라 주재 쿠바 대사관을 방문하시고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였다”고 밝힘.
- 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조의록에 “탁월한 지도자는 비록 서거하였지만 그의 이름과 업적은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영생할 것”이라며 “위대한 동지, 위대한 전우를 잃은 아픔을 안고, 김정은”이라고 적음.

2016. 12. 2.

■ **김정은, 서울겨냥 포사격훈련 지도…“남조선 것들 쓸어버려야”(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 결의 채택 직후 백령도와 연평도, 서울을 겨냥한 북한군의 포병사격훈련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가 보도함.
- 조선중앙통신은 2일 "김정은 동지께서 12월 1일 조선인민군 전선포병부대들의 포병대 집중 화력타격 연습(훈련)을 지도하시였다"고 밝혔다. 훈련은 강원도 원산 지역 해안에서 이뤄짐.
- 중앙통신은 "연습에는 남조선 괴뢰 서북도서방위사령부 관하 6해병여단과 연평부대를 쓸어버릴 임무를 맡고 있는 서남전선수역 최전방의 섬방어대 포병구분대들과 서울시를 비롯한 전선 주타격 방향과 보조타격 방향의 남조선 작전지대 군사대상물들과 반동 통치기관들을 타격할 임무를 맡고 있는 전선 중장거리포병 구분대들이 참가하였다"고 밝힘.

■北, 김정은 지휘 대규모 포사격훈련 사진 20장 공개(연합뉴스)

- 북한이 2일 백령도와 연평도, 서울 등 수도권 등을 타격목표로 설정한 대규모 포병사격훈련 모습을 담은 컬러 사진 수십 장을 공개하며 군사위협 강도를 높임.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지도하에 전날 인민군 전선포병부대들의 '포병대 집중 화력타격 연습(훈련)'이 진행됐다면서 1~2면에 관련 사진 총 20장을 실음.
- 북한 관영매체들은 이번 훈련이 진행된 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우리군은 강원도 원산지역 해안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6. 11. 27.

■北 국가가격위원회 위원장 교체...량익경→최강(연합뉴스)

- 북한에서 가격과 임금을 결정하는 기구인 국가가격위원회의 위원장이 교체된 것으로 27일 확인됨.
- 북한의 대외용 라디오방송인 평양방송은 지난 25일 국가가격기관 창립 70돌 기념보고회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며 "최강 국가가격위원회 위원장이 기념보고를 했다"고 밝힘.
- 새로 바뀐 최강 위원장은 북한 경제정책의 기획·수립·지도·감독을 총괄하는 내각의 중앙행정기관인 국가계획위원회에서 부위원장까지 지낸 인물임.

2016. 11. 28.

■ **北 최룡해, 카스트로 조문차 출국(연합뉴스)**

- 북한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6일 사망한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을 조문하기 위해 28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최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당 및 국가 조문 대표단에는 이밖에 김용수 당 중앙위원회 부장, 서홍찬 인민무력성 제1부상, 류명선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신흥철 외무성 부상 등이 포함됨.

■ **北 지도부, 카스트로 타계에 쿠바대사관 찾아 조의(연합뉴스)**

- 북한 당·정·군 지도부가 28일 북한주재 쿠바대사관을 찾아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의 타계와 관련, 조의를 표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이 자리에는 김영남, 박봉주, 김기남, 최태복, 박영식, 리수용, 김평해, 리만건, 오수용, 곽범기, 김영철, 리용호, 리일환, 안정수 등 북한 최고위급 지도부가 총출동함.
- 앞서 북한 당국은 오는 30일까지 카스트로 사망을 애도하는 기간으로 선포하고 이 기간 주요 기관·청사 등에 조기를 게양할 것을 지시했으며, 이날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당 및 국가 조문 대표단을 쿠바로 파견함.

2016. 12. 1.

■ **최룡해 이끄는 北대표단, 사망한 카스트로에 조의(연합뉴스)**

-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끄는 북한 대표단이 쿠바 현지에서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의 사망에 조의를 표했다고 북한 관영매체가 1일 보도함.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대표단이) 11월 29일 조의식장인 쿠바 국립극장을 찾아 조의를 표시하였다”며 이들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보낸 애도 화환을 전달했다고 밝힘.
- 대표단은 카스트로를 추모하며 묵상했다고 통신은 전함.

■ **“독일주재 北대사 곧 교체…‘삼수’끝 후임자 승인”(연합뉴스)**

- 리시홍 주(駐)독일 북한 대사가 조만간 교체돼 평양으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 보도함.

- 이 방송은 현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리 대사의 후임자가 독일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주재국의 부임 승인)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힘.
- 방송은 독일 정부가 북한이 요청한 리 대사의 후임자를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거부했다며 북한으로서는 ‘삼수’ 끝에 신임 대사를 보내게 된 셈이라고 설명함.

■ “北 조평통 위원장에 리선권 국방위 정책국장…김영철 오른팔”(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 사업을 담당하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에 리선권 국방위원회 정책국장이 임명된 것으로 알려짐.
- 탈북민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23일 사망한 류미영 북한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장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인사의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밝힘.
- 리선권의 계급은 대좌(우리의 대령)로 알려졌지만, 장성으로 진급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옴.

다. 공식행사

■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 기관 행위

2016. 11. 27.

■ “북한 내년 달력에도 김정은 생일 명절로 표기 안돼”(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생일(1월8일)이 내년 북한 달력에도 명절로 표기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연합뉴스가 27일 대북매체인 자유북한방송에서 입수한 북한 달력을 확인해 본 결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2월 16일)과 김일성 주석의 생일(4월 15일)은 각각 광명성절과 태양절로 표시돼 있으나 김정은의 생일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명절로 표시되지 않음.
-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11일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국제준비위원회 참가자들의 호소문을 공개하면서 “다음해 1월 김정은 각하의 탄생일을 성대히 경축하며 광명성절과 태양절에 이어 김정숙 여사의 탄생일(12월 24일)을 맞는 12월까지 다채로운 정치문화활동을 활발히 벌이자”며 김 위원장의 생일을 명절로 지정할 가능성을 내비침.

2016. 11. 28.

■ **北, 카스트로 사망에 28~30일 애도기간(연합뉴스)**

- 북한은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의 사망과 관련해 3일의 애도 기간을 결정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8일 보도함.
-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은 11월 28~30일을 애도 기간으로 선포하고 이 기간 중요기관 청사와 지정 장소에 조기를 게양할 것을 지난 27일 결정함.

2016. 12. 1.

■ **北, 김정일 5주기 앞두고 추모 분위기 시동(연합뉴스)**

-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1일 김정일 5주기를 앞둔 홍순명 인민봉사총국 부총국장 등의 소감을 내보냄.
- 홍 부총국장은 방송과 인터뷰에서 “정말 우리 장군님(김정일)의 혁명 생애는 인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깡그리 훑아버린 태우신 가장 위대하고도 성스러운 한생”이라고 강조함.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전사, 제자답게 장군님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자’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김정일을 찬양함.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2016. 12. 2.

■ **“北 수해복구 열차 전복돼 300여명 사상”(연합뉴스)**

- 북한은 2일 천안함 피격사건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서술을 강화한 우리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와 관련해 "어리석은 망동"이라며 비난함.
- 북한 교육위원회 대변인은 담화에서 “지난 11월 28일 괴뢰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검토본이라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놀음을 벌려놓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담화는 특히 교과서가 천안함 침몰 사건을 ‘북한에 의한 천안함 피격’으로 기술하고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해 다루는 등 북한의 도발과 관련한 분량을 늘린 점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함.

2. 경제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다. 경제 상황

- 특이사항 없음

라. 대외 경제 관계

2016. 11. 28.

- **北, 여행제한 완화로 관광객 끌기 ‘안간힘’…유커 방북 증가세(연합뉴스)**
 - 최근 북한의 여행제한 완화로 중국 관광객의 방북이 증가하고 있다고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8일 보도함.
 - 북한은 평양·신의주·동림·개성·나선 등을 중국 관광객에게 개방했고, 지난 7월부터 중국인에게 여권 없이도 만나질 짜리 북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
 - SCMP는 중국 관광객이 북한을 찾는 이유를 호기심, 그리고 예전 중국과 비슷한 모습에서 느낄 수 있는 향수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함.

2016. 11. 30.

- **“10월 북한 對中 석탄 수출액, 작년 대비 70% 증가”(연합뉴스)**
 - 북한이 유엔의 제재 속에서도 지난달 중국에 대한 석탄 수출을 작년보다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30일 보도함.
 - 방송은 한국무역협회가 집계한 중국 해관총서(관세청) 자료를 인용, 10월 북한의 대(對) 중국 석탄 수출액이 1억200만 달러(1천197억 원)를 기록했다고 밝힘.
 -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7% 증가한 수치이며, 직전 달인 올해 9월보다도 22% 늘어난 액수임.

2016. 12. 1.

■ **‘대북제재 무색’ 북중 무역액 3년 만에 증가세(연합뉴스)**

-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올해 북·중 무역액은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남.
- 1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10월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20억8천700만 달러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25억500만 달러로 작년 대비 6.4% 늘어남.
- 이에 따라 올해 1~10월 북·중 무역액은 45억9천300만 달러로 작년 대비 3.4% 증가함.

3. 사회문화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2016. 11. 30.

■ **“北, 수해지역 노동력 보충 위해 노숙자 방랑자 이주”(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지난 9월 태풍 ‘라이언록’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유난히 컸던 함경북도 무산군과 연사군에 노동력 보충을 위해 다른 지역의 노숙자나 방랑자들을 이주시키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0일 보도함.
- 일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북한 수해지역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수해로 사망, 실종 등 피해가 컸던 무산군과 연사군 주변의 농장에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외지에서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있다”고 RFA에 전함.
- 이시마루 대표는 무산군의 경우 이미 500여 명의 외지인이 이주했다며 “이주 대상자는 집이 없는 꽃제비(거리를 떠도는 노숙자)나 방랑자, 거주 등록이 안 돼 있는 주민들”이라고 밝힘.

2016. 12. 2.

■ **北, ‘반국가범죄·총기소지자 신고하라’ 공고문(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반국가 범죄나 총기류 소지 등의 행위를 보면 신고하라는 공고문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국의 북한전문 인터넷 매체 'NK뉴스'가 2일 보도함.

- NK뉴스는 평양 내에서 찍힌 공고문 사진을 입수했다며 여기에는 주민들이 당국에 신고해야 할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함.
- NK뉴스는 익명의 한국 내 북한 전문가를 인용해 "이는 주민들 간의 상호감시를 늘리려고 하는 시도"라고 분석함.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라. 사회 동향

2016. 11. 26.

■ ‘그 많던 꽃제비 어디갔나’…北 나선시 꽃제비 추방설(연합뉴스)

- 북한이 국가 위신을 떨어뜨린다고 평양에 이어 함경북도 나선시에서 꽃제비(거리를 떠도는 노숙 아동)를 모두 추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6일 보도함.
- 사업차 나선시를 방문한 중국의 한 기업인은 RFA에 “지금까지 라선(나선) 지역에서는 구걸행각을 하는 꽃제비나 장애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서 나선시에 꽃제비나 장애인이 있다면 자신의 눈에 띄지 않을 리가 없다”고 주장함.
- 다른 중국 기업인도 “라선특구에서 장애인이나 구걸행각을 하는 어린 꽃제비를 본 적이 없다”면서 “북한보다 잘사는 중국이나 다른 선진국들조차도 장애인이거나 구걸행각을 하는 사람이 눈에 띄는데 라선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라고 말함.

2016. 11. 28.

■ “北 어업권 판매로 어획량 줄자 어민들 강도 행위도”(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중국에 어업권을 팔아넘긴 이후 어획량이 줄면서 북한 어민들이 해상에서 강도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 보도함.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RFA에 “중양(당국)에서 동·서해의 주요어장을 중국에 넘긴 후 어업생산이 크게 줄면서 대형어선이 소형어선을 습격하는 등 강도행위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함.
- 소식통은 어장을 잃은 어선들이 한정된 수역에 몰려 조업을 하다 보니 어획량을

채우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면서 “군부대 외화벌이 어선들이 해상에서 민간 어선에 접근해 폭력을 행사하면서 물고기와 기름(휘발유·디젤유)까지 강탈하는 등 해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설명함.

2016. 12. 1.

■ 北인권단체 “北서 마약 일상화·주민의 최소 30% 소비”(연합뉴스)

- 북한 주민의 30% 이상이 마약을 소비할 정도로 북한에 마약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는 북한 인권단체의 분석이 나옴.
-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북한 마약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한 ‘북한 마약류감시기구’의 이관형 연구원은 이 단체가 1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하는 북한 마약문제 세미나 발표문에서 이같이 밝힘.
- 탈북민 심층면접 등을 토대로 북한 주민의 마약 소비 실태를 조사한 이 연구원은 “북한 주민들에게 마약은 ‘일상’, ‘문화’가 되어버렸다”며 “누구라도 (마약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적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진단함.

2016. 12. 2.

■ “北 수해복구 열차 전복돼 300여명 사상”(연합뉴스)

- 북한 함경남도 단천시 인근에서 지난달 21일 수해복구에 동원됐던 중장비와 인력을 실은 열차가 전복돼 3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일 보도함.
-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RFA에 “수해복구에 동원됐다 철수하던 열차가 전복돼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 사고로 열차에 실었던 굴삭기 5대와 20t급 화물차 3대가 파손되고 3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함.
- 소식통은 사고를 당한 인력 중 40명은 현장에서 즉사했고, 나머지 부상자들은 단천시 여러 병원에 분산돼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4. 외교국방

가. 북·미 관계

2016. 12. 1.

■ <유엔 대북제재> 美, 독자제재 강화...세컨더리보이콧 확대 주목(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30일(현지시간)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2321호를 채택함에 따라 조만간 추가 독자제재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짐.
- 미국 정부의 독자제재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북한 인사와 기관 등에 대한 제재확대, 돈줄 차단, 인권 문제 이슈화 등이 핵심임.
- 미 정부는 지난 1월 4차 핵실험 이후 독자제재를 본격적으로 강화해왔으며, 앞으로 동원할 제재-인권-정보의 3각 제재의 틀과 내용은 거의 공개된 상태임.

■ <유엔 대북제재> 美백악관 “북에 실질적인 압박될 것”(연합뉴스)

- 미국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 232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에 대해 북한에 실질적인 압박이 될 것이라고 밝힘.
-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석탄 수출로 벌어들인 자금의 상당액이 핵 개발에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새 대북제재 결의안이 북한의 석탄 수출에 상한을 설정한 점을 평가함.
- 그러면서 그는 “석탄 수출 상한 설정은 북한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방식의 압박이며,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의 강도가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전망함.

2016. 12. 2.

■ 주유엔 美대사 “새 대북제재, 北변화 요인될 것”(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최근 채택한 새 대북제재 결의 2321호의 이행은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평가함.
- 파워 대사는 2일 보도된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결의 2321호의) 이행은 (북한의 행태에) 변화를 가져올 것(will be the difference maker)”이라고 말함.
- 그는 북한 어린이들이 굶주리는 상황에서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핵무기 개발에 기술과 자금, 다양한 장비를 동원해 왔다면서 이번 제재가 이를 지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고 VOA는 전함.

나. 북·중 관계

2016. 11. 29.

■ **“중국, 열차 통해서도 北에 연료 공급”(연합뉴스)**

- 중국이 송유관을 통한 대북 원유 공급에 더해 열차를 통해서도 북한에 연료를 공급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9일 보도함.
- 중국의 한 대북소식통은 RFA에 “단둥 시내의 중국군 연료 공급기지에서 철도를 통해 비밀리에 북한에 유류가 공급되고 있다”고 전함.
- 소식통은 다만 유류 수송열차가 북한으로 직접 들어가는지 중간에 다른 운송수단에 옮겨지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함.

2016. 12. 1.

■ **중국, 북핵 문제 6자 회담 재개로 해결해야(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북한 광물 수출에 따른 수입을 연간 8억 달러(9천390억 원) 정도 줄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찬성하면서도 6자 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섬.
- 이는 그동안 중국 정부가 계속 주장해왔던 것으로 대북 제재에 관한 중국의 부담을 덜고 6자 회담을 통해 북한에 대한 주도권을 잡은 채 한국, 미국과 갈등을 완화해보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임.
-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지난달 30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응징하기 위한 대북 제재 결의 2321호가 만장일치로 통과된 뒤 한반도 핵 문제를 정치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6자 회담이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다. 북·일 관계

2016. 11. 27.

■ **日정부, 미사일방어 강화에 1조9천억원 추가투입…北미사일 대비(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1천800억엔(약 1조8천800억원)을 추가 투입해 미사일 방어(MD) 태세를 강화하기로 함.
- 일본 정부는 내년 초 국회에 제출 예정인 올해 3차 추경예산 규모를 1조엔(약 10조4천억엔) 규모로 정하고 이 중 18%에 해당하는 1조8천억엔을 미사일 방어 강화에 배정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7일 보도함.

- 아베 신조 총리는 조만간 아소 다로 재무상에게 추경예산 편성을 지시해 다음 달 중순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임.

2016. 11. 28.

■ **北, 무력사용 확대된 日자위대에 “무모한 군국주의 부활”(연합뉴스)**

- 북한은 일본이 육상자위대의 무력사용을 확대한 결정에 대해 “무모한 군국주의 부활 책동”이라고 비난함.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8일 논평에서 “일본은 지난 세기 전반기 인류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뜨우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막대한 후과를 끼친 전범국”이라며 이같이 밝힘.
- 앞서 일본은 지난 15일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남수단에서 평화유지활동(PKO)을 하는 육상자위대가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다른 나라 군인이나 민간인 구출 목적으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출동경호’ 임무를 새로 부여함.

2016. 11. 30.

■ **〈유엔 대북제재〉 日, 독자제재 곧 결정…인적왕래 규제 확대(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북한을 추가 제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2321호가 통과됨에 따라 그동안 논의해 왔던 독자제재를 서두르기로 함.
- 3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은 다음 달 2일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독자제재 조치를 강화할 방침임.
- 일본은 한국, 미국과 보조를 맞추고자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로 독자제재 시점을 조정해 국제 공조를 강화한다는 전략임.

2016. 12. 2.

■ **日 대북 독자제재 확대…아베 “납치·핵·미사일 포괄해결”(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 채택에 따라 현재 실시 중인 선박 왕래 규제 및 자산동결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대북 독자제재 강화안을 2일 확정함.
- 일본 정부는 이날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총리실에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관련 관계 각료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함.

- 이날 결정된 독자제재는 북한을 방문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간부 및 재일 외국인 핵·미사일 개발자의 재입국 금지 대상 확대, 북한에 들렀던 모든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단체·개인의 자산동결 대상 확대 등이 핵심임.

라. 북·러 관계

2016. 11. 30.

■ 러 외무부, 안보리 대북 결의 입장 표명 유보…“검토 중”(연합뉴스)

- 북한의 제5차 핵실험을 응징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이 30일 채택될 예정인 가운데 러시아 외무부는 이 결의안을 지지할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음.
- 안보리는 30일 오전 9시(미국 뉴욕 시간, 한국시간 30일 밤 11시) 15개 이사국이 참가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임.
-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안보리 대북 결의안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질문에 “지난 25일 미국이 파트너 국가들에 회람한 결의안에 대한 검토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만 밝힘.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6. 11. 26.

■ IMO “예고없는 북미사일발사 심각한 우려”…북한 명시해 비판(연합뉴스)

-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유엔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가 사전 통보 없이 반복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북한의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
- IMO는 북한이 올해 들어 사전 경보 없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IMO의 관련 협약과 결의 준수를 촉구하는 결정회람문(Circular)을 25일(현지시간) 제97차 해사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채택했다고 외교부가 26일 밝힘.
- 외교부는 “북한측 입장을 지지하는 국가는 북한 이외에 단 한 나라도 없었다”며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힘.

■ 유엔, 北수출 1/4에 타격, 9천400억원 규모 제재안…석탄수출 타깃(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이 석탄을 비롯한 북한 전체 수출액의 4분의 1 정도에 타격을 주는 새 대북제재 결의안 승인을 앞두고 있다고 외교소식통이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밝힘.
- 북한의 9월 5차 핵실험 이후 미국이 초안을 작성한 이 결의안은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에 상한선을 두는 것이 핵심으로, 북한의 연간 수출액 약 30억달러(한화 약 3조5천300억원)의 4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최소 8억달러(9천420억원)를 삭감하는 것이 골자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함.
- 제재안이 최종 확정되면 그동안 북한이 수출했던 물량 가운데 한도 초과분은 수출할 수가 없게 돼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2016. 11. 27.

■ 이상덕 주싱가포르대사 “싱가포르 비자조치, 北활동 상당 제약”(연합뉴스)

- 이상덕 주싱가포르 대사는 싱가포르 정부가 대북제재의 일환으로 지난 10월부터 북한을 비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북한인들의 싱가포르 출입국 및 싱가포르내 활동이 상당히 제약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 이 대사는 지난 22일 한·아세안(ASEAN) 관계 취재를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한 연합뉴스 등 외교부 공동취재단과 대사관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 사람들은 그동안 30일간의 싱가포르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사전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함.
- 싱가포르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이행 차원에서 지난 7월 말 북한을 비자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공식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10월 1일부터 이를 실제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됨.

2016. 11. 28.

■ 인니 아세안 국장 “남북 간 중요한 역할 저버리지 않을 것”(연합뉴스)

- 조지 란뚜 인도네시아 외교부 아세안(ASEAN) 협력국장은 “인도네시아는 남북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그런 역할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란뚜 국장은 지난 25일 한·아세안(ASEAN) 관계 취재를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연합뉴스 등 외교부 공동취재단과 자카르타 시내의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한반도 정세가 긴장되면 인도네시아는 북한에 특사를 보내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왔다”면서 이같이 말함.

- 그는 “남북은 모두 인도네시아의 친구이며, 전 세계에서 남북 양쪽과 모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고 강조함.

2016. 11. 29.

■ 안보리, 30일 대북 제재안 채택 예고…‘북한정권 자금줄 봉쇄’(연합뉴스)

-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징계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안이 30일(현지시간) 채택될 전망이다.
- 안보리는 이날 오전 15개 이사국이 참가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9월9일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28일 전해짐.
- 국내 절차를 이유로 동의 여부를 미뤘던 러시아도 최근 결의안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짐.

■ “안보리 대북결의안 2270호 이행보고서 제출한 나라 70개 육박”(연합뉴스)

- 북한의 제4차 핵실험(1월 6일)에 대응해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의 이행보고서를 현재까지 70개 가까운 나라가 제출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9일 보도함.
- VOA에 따르면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스페인의 유엔 주재 대표부는 지난 28일 이 매체에 보낸 이메일에서 69개국이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힘.
- 특히 7개국이 이번 결의에서 처음으로 대북제재 이행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이 가운데 4개국은 앙골라, 부룬디, 모리셔스, 세네갈 등 아프리카 국가라고 VOA는 밝힘.

2016. 11. 30.

■ <유엔 대북제재> ‘블랙리스트’ 누가 올랐나…北현직대사 첫 포함(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30일(현지시간)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결의 2321호를 통해 북한 개인 11명과 기관 10곳을 제재대상에 추가함.
- 일종의 ‘블랙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안보리 제재대상에 새로 오른 이들은 자산이 동결되고 외국으로의 여행이 금지됨.
- 이번 추가 제재 명단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사는 박춘일(62) 주 이집트 북한 대사임.

2016. 12. 1.

■ <유엔 대북제재> EU, 독자 대북 제재 논의 본격화할 듯(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30일 북한의 제5차 핵실험을 응징하기 위한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함에 따라 유럽연합(EU)도 곧 독자적인 제재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임.
- EU는 이날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과 관련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는 않음.
- 다만 EU의 핵심국가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가 이번 유엔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EU도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적극 지지할 것이라는 게 브뤼셀 외교가의 일치된 견해임.

■ <유엔 대북제재> 北대표부 “차별적 이중적 불공평 제재 인정 안해”(연합뉴스)

-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측은 30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 대북제재결의에 대해 “우리는 차별적이고 이중적이고 일방적이며 불공평한 제재 결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함.
- 북한대표부의 한 외교관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우리의 입장은 명백하고 시종일관하다”라며 안보리의 새 결의를 강하게 비판함.
- 안보리 15개 이사국은 이날 북한의 9월 9일 5차 핵실험에 대응한 대북제재결의 2321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킴.

■ 안보리, 새 대북제재 만장일치 결의...석탄·광물수출 정조준(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30일(현지시간) 북한의 광물 수출에 따른 수입을 연간 8억 달러(9천390억 원) 정도 줄이는 내용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함.
- 기존의 대북제재를 실질적으로 강화한 새 결의 2321호에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핵·미사일 실험을 거듭해온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거론하는 조항이 처음으로 들어감.
- 안보리는 이날 오전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지난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응징하기 위한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15개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킴.

■ 北, 유엔 안보리 2321호 채택에 “전면 배격” 반발(연합뉴스)

-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응징하기 위한 대북

- 제재 결의 232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반발함.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일 담화를 통해 “유엔 안보리가 지난 9월에 진행된 우리의 핵탄두 폭발시험을 결코 드는 제재 결의를 조작해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대변인은 “이는 미국의 손탁(손아귀)에 놀아나는 유엔 안보리가 자기의 권능을 벗어나 우리 공화국의 자위권을 부정한 또 한 차례의 월권행위, 주권침해행위”라고 비난함.

2016. 12. 2.

■ 안보리 새 대북제재, “기존 2270호 구멍 제대로 메워 효과 클것”(연합뉴스)

- 정부 고위 관계자는 1일(현지시간) 북한의 광물수출 제한, 노동자 외국송출 제한, 금융제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 결의 2321호에 대해 “기존 2270호의 구멍을 제대로 메우는 것”이라고 평가함.
- 이 관계자는 이날 워싱턴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이번 2321호가 이전의 2270호에 비해 크게 강화된 것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는 질문에 “2270호 자체가 너무 센 결의였고 이번 결의에서 최선의 방법은 2270호의 구멍을 메우는 것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힘.
- 또 “2270호가 유엔 회원국 내 북한 금융기관을 90일 이내에 문 닫으라는 것이었는데 이번 2321호는 평양에 있는 외국은행도 문을 닫으라는 것임”이라고 설명함.

바. 군사 및 핵·미사일

2016. 11. 30.

■ 北, 12월 1일 동계훈련 돌입…“김정은, 실전수준 강화 지시”(연합뉴스)

- 북한이 12월 1일부터 실전에 준하는 수준으로 연례 인민군 동계훈련을 시작한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0일 보도함.
- RFA는 북한이 예년과 달리 이번 훈련 수준을 연례훈련을 넘어 즉시 전쟁에 돌입할 수 있는 ‘실전 수준’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분석함.
-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동계훈련 준비를 빈틈없이 하라”는 첫 명령을 내린 뒤에 한 달 새 모두 네 차례 동계훈련과 관련된 명령을 내렸다고 RFA가 북한군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함.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정세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11.29		미국무부 “평화적 시위-집회 지지...한미동맹-방위공약 변함없어”(연합뉴스)
	11.30	한·미 공군, 대규모 연합훈련 돌입...北핵심시설 타격연습(연합뉴스)	
	12.1	외교부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이달 중순 서울서 회동”(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11.29		中, 9월 서해서 대규모 실탄훈련...“한국 겨냥” 관측(연합뉴스)
	12.1		시진핑 ‘중화문에 부흥’ 선언...한류규제 본격화하나(연합뉴스)
	12.2		中, 한국 식품·화장품 집중 규제...통관 거부 작년수준 넘어(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11.29		日언론 “한·일·중정상회의 연내 개최 힘들듯...日정부내에서 연기론”(연합뉴스)
	11.30		日관방 “임기내사퇴 무관하게 위안부 정보보호협정 이행돼야”(연합뉴스)
	12.2		최순실 파문에 한·일통화스와프 협상도 멈췄다(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12.1		<유엔 대북제재> 러 “안보리 결의 한반도 군사력 증대에 이용돼선 안돼”(연합뉴스)

2. 주변국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미러 관계	12.2		푸틴 “美 트럼프 행정부와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할 것”(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일본
중일 관계	11.27	中, 전투기 편대 첫 미야코 해협 통과…日 ‘긴급발진’(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러시아
중러 관계			
분류	일자	일본	러시아
일러 관계			

■ 주간 동향

1. 한반도정세

가. 한·미 관계

2016. 11. 29.

■ 미국무부 “평화적 시위-집회 지지…한-미동맹-방위공약 변함없어”(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28일(현지시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한국 국민의 잇따른 대규모 촛불집회에 대해 “평화적 시위와 집회에 관한 우리의 입장은 잘 알려져 있고, 전 세계에서 계속 그것을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집회 관련 보도를 봐서 내용을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함.
- 커비 대변인은 그러나 “이것이 한국, 한국 정부, 한국 국민에 대한 우리의 방위 약속을 조금도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은 우리의 모든 동맹 약속을 계속 확실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언급함.

2016. 11. 30.

■ 한·미 공군, 대규모 연합훈련 돌입…北핵심시설 타격연습(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의 공군이 전시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한 ‘비질런트 에이 스’(Vigilant ACE) 훈련에 30일 돌입함.
- 한국 공군작전사령부와 주한 미7공군사령부 주관으로 12월 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우리 측에서 제20전투비행단과 제38전투비행대대 등 10여 개 부대가, 미국에서 제51전투비행단과 해병항공단 등 태평양사령부 예하 5개 부대가 참가함.
- 우리 공군에서 주력 전투기인 F-15K와 KF-16를 비롯해 F-4, F-5, E-737 항공 통제기 등이 동원되며, 미국에서는 F-16 전투기와 주일 미군기지에 있는 전자전 기 EA-18G, F/A-18D 전투기가 출격함.

■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12월 중순 서울서 회동(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 일본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12월 중 서울에서 회동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30일 알려짐.

-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일 외교 당국은 12월 중순께 세 나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서울에서 개최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구체적인 일정을 검토 중에 있음.
- 협의에는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참석할 예정임.

2016. 12. 1.

■ 외교부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이달 중순 서울서 회동”(연합뉴스)

-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신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채택된 데 이어 한미일 독자제재 조치 발표와 미국 신행정부 교체 등의 상황을 고려했다”고 회동 합의 사실을 전하고, “조만간 구체적인 일정 등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힘.
- 이번 협의에는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참석할 예정임.
- 아울러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계기로 3국간 북한 핵·미사일 등을 비롯한 대북정보 공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임.

나. 한·중 관계

2016. 11. 29.

■ 中, 9월 서해서 대규모 실탄훈련…“한국 겨냥” 관측(연합뉴스)

- 중국 해군이 지난 9월 중순 서해(중국명 황해)와 보하이 해역에서 3개 함대를 총동원해 대규모 실탄훈련을 시행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됨.
- 중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시기와 지역 등으로 볼 때 사드 배치를 결정한 한국을 겨냥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함.
-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를 두고 사드 배치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 중국이 한국의 태도변화를 기대하면서 압력은 가하되 지나치게 자극은 않겠다는 의도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2016. 12. 1.

■ 시진핑 ‘중화문에 부흥’ 선언…한류규제 본격화하나(연합뉴스)

- 중국 당국의 한류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의 문화예술가를 상대로 "중화 문화에 자신감을 갖고 창조적 작품을 만들라"고 촉구함.
- 1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최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문학예술계 연합회 및 중국작가협회 전국대표대회에서 강연을 통해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 시대를 맞아 문예 수준을 최고조로 올리자”고 말함.
- 중국 당국의 내부 지시에 따라 한류 스타를 모델로 쓴 중국 광고를 잇달아 교체하고 한국 스타들의 중국 공연과 한국 영화의 중국 상영을 승인치 않는 등 금한령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됨.

2016. 12. 2.

■ 中, 한국 식품·화장품 집중 규제…통관 거부 작년수준 넘어(연합뉴스)

- 중국 정부가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강력히 반대하는 가운데 올해 한국 식품과 화장품 등 소비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것으로 확인됨.
- 이들 품목에 대한 통관 거부가 이미 작년 수준을 추월, 롯데 등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견제와 한국산 공산품에 대한 압박이 동시에 진행되는 모습임.
- 2일 중국국가질검총국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한국산 식품과 화장품의 통관 거부는 148건으로 지난해 전체 130건을 훌쩍 넘어섬.

다. 한·일 관계

2016. 11. 29.

■ 日언론 “한·일·중정상회의 연내개최 힘들듯…日정부내에서 연기론”(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발의를 둘러싼 한국 내 상황으로 인해 한·일·중 정상회의가 예정됐던 다음 달 열리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9일 보도함.
- 신문은 최순실씨 국정개입 사건으로 인해 한국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일본 정부 내에서는 회의를 내년 초 이후로 연기하는 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함.
- 신문은 “박 대통령이 탄핵안 발의로 직무를 정지당하면 한국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대리로 정상회담에 참석하려 할 가능성이 높는데, 이에 대해 중국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어 연내 회의 성사가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고 전함.

2016. 11. 30.

■ **日관방 “임기내사퇴 무관하게 위안부 정보보호협정 이행돼야”(연합뉴스)**

-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30일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내 사퇴 의사 표명과 무관하게 지난해 말 이뤄진 양국간 위안부 문제 합의는 이행돼야 한다고 밝힘.
- 그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사의 표명에 따라 위안부 합의, 특히 소녀상 이전이 진행될지 의문이 있다”는 질문에 “지난해 합의한 것을 양국이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함.
- 이어 “위안부 합의나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은 국가간 합의사항이므로, 각국이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함.

2016. 12. 2.

■ **최순실 파문에 한 일통화스와프 협상도 멈췄다(연합뉴스)**

-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2일 한일간 통화스와프 재개 협상이 정체돼 있다고 밝힘.
- 이는 최순실씨 국정농단 등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만료 전 사의 표명 등의 상황이 한·일간 통화스와프 협상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내비친 것임.
- 아소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적어도 누가 협상 내용을 결정하는지 알 수 없다”며 “협상을 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함.

라. 한·러 관계

2016. 12. 1.

■ **〈유엔 대북제재〉 러 “안보리 결의 한반도 군사력 증대에 이용돼선 안돼”(연합뉴스)**

-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2321호 채택을 지지한 러시아는 이 결의가 북한 경제 악화나 한반도에 대한 외국 군사력 증강 배치에 이용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힘.
-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유엔 주재 러시아 부대사 블라디미르 사프론코프는 이날 새로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러시아를 포함한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된 뒤 이같이 주장함.
- 그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합법적 요구를 무시하면서 안보리 결의 형태의 단호한 조치가 불가피했지만, 이 문서가 한반도 핵 문제 논의를 위한 협상 재개와 동북아

지역의 다른 문제들에 대한 정치적 해결 방안 모색 가능성을 막는 데 목적을 둔 것은 아니다”고 강조함.

2. 주변국정세

가. 미·중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나. 미·일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다. 미·러 관계

2016. 12. 2.

- 푸틴 “美 트럼프 행정부와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할 것”(연합뉴스)
 - 러시아는 미국의 새 행정부와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밝힘.
 - 푸틴 대통령은 이날 크렘린궁에서 행한 연례 대의회 국정연설에서 “대등하고 상호이익의 원칙을 바탕으로 미-러 양자 관계를 정상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내년 1월 출범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권과의 협력에 대한 기대를 표시함.
 - 그는 “세계 및 지역 문제 해결에서 미-러 양국의 협력은 국제사회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며 “두 나라는 국제 안보와 안정을 보장하고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 체제를 강화해야 할 공통의 책임을 지고 있다”고 주장함.

라. 중·일 관계

2016. 11. 27.

- 中, 전투기 편대 첫 미야코 해협 통과…日 ‘긴급발진’(연합뉴스)
 - 중국이 지난 25일 최신형 전략폭격기 홍-6K를 포함한 전투기 편대를 처음으로 미야코해협으로 파견, 대규모 비행훈련을 함.
 - 미야코 해협은 중일 간 영유권 갈등을 빚는 센카쿠열도에 인접한 곳이어서 일본을

겨냥해 무력시위를 벌였다는 관측을 낳고 있음.

- 27일 중국 경화시보에 따르면 중국 공군은 자국 전투기 편대가 25일 바시 해협(대만과 필리핀 사이)과 미야코 해협을 통과해 서태평양에서 원해(遠海·원양) 훈련을 시행했다고 밝힘.

마. 중·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일·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Ⅲ 북한인권

■ 개요

분류	일자	
북한인권 국제동향	11.26	북한 조그런 결성 70주년...기독교 탄압 최악(미국의소리)
	11.28	호주서 내달 4~10일 '북한 인권주간' 행사(연합뉴스)
		동남아에 北실상 알린다...인도네시아서 북한 인권영화 상영회(연합뉴스)
	11.29	미-캐나다 정부, 북한 억류 자국민 석방 계속 시도 중 (미국의소리)
		"한국 NGO, 北인권피해자 매장지 보고서 발간 추진"(연합뉴스)
	12.1	유엔 전문가그룹 "北 인권피해자 증언 이메일로 접수"(연합뉴스)
美북한인권위 "北, 정치범수용소 '25호 청진관리소' 계속 증설"(연합뉴스)		
12.2	유엔서 북한인권 토론회... "국제사회, 北인권문제 지속 압박해야"(연합뉴스)	
북한인권 내부동향	11.28	北, 독재자 인권유린 단죄하는 ICC 비난... "서방의 꼭두각시"(연합뉴스)
북한인권 남한동향	11.28	북한인권기록센터, 탈북민 대상 시범조사(연합뉴스)
탈북자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12.1	"탈북민 30여명, 중국 공안에 체포돼 복송 위기"(연합뉴스)
대북지원	11.29	"지난달 식량지원 늘면서 北주민 식량배급량 올 들어 최대"(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6. 11. 26.

■ 북한 조그런 결성 70주년...기독교 탄압 최악(미국의소리)

- 북한 정권이 기독교 교리를 독재통치의 수단으로 활용했을 뿐 기독교 자체는 외세의 앞잡이라며 철저히 비판하고 탄압하고 있다는 것임.
- 실제로 전문가들은 북한이 기독교의 십계명을 유일영도체계 10대 원칙, 삼위일체는 수령 부자와 주체사상, 회개기도와 구역 모임은 생활총화, 설교와 말씀은 교시, 예수의 탄생일인 성탄절은 김일성의 태양절로 탈바꿈시켰다고 지적함.
- 따라서 조그런 역시 순수 기독교단체가 아니라 김 씨 정권의 우상숭배를 위한 어용단체, 대외 체면치레와 외부의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한 정치단체에 불과하다고 탈북민 출신 목사들은 지적함.

2016. 11. 28.

■ 호주서 내달 4~10일 '북한 인권주간' 행사(연합뉴스)

- 북한의 참혹한 인권유린 실태에 대한 국제 여론을 환기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행사가 다음 달 호주에서 열림.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호주협의회(회장 이숙진)는 오는 12월 4일 호주 시드니 테크놀러지파크를 시작으로 퍼스 순복음교회(5일)와 멜버른 빅토리아한인회관(8일), 브리즈번 순복음교회(10일) 등에서 '2016 북한 인권 주간'(North Korean Human Rights Week) 행사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힘.
- 행사는 북한 인권영화제, 초청강연, 북한 인권 관련 전시회 등으로 진행될 예정임.

■ 동남아에 北실상 알린다...인도네시아서 북한 인권영화 상영회(연합뉴스)

- 동남아시아에 북한의 인권 실상을 알리기 위한 '북한 인권영화 상영회'가 28일 오후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3일간 일정으로 개막함.
- 북한인권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와 인도네시아 인권단체 엘삼(ELSAM), 파함(PAHAM)이 공동주최하고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주관한 이번 상영회에서는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와 탈북자 문제 등을 다룬 5편의 영화가 상영됨.
- 이번 행사를 후원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남아 남부협의회 전민식 회장은 "동

남아 국가 상당수는 북한의 전통적 우방이지만 이들이 생각하는 북한과, 북한의 현실은 다른 측면이 크다”면서 “북한의 실상을 알려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끌어내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함.

2016. 11. 29.

■ **마케나다 정부, 북한 억류 자국민 석방 계속 시도 중 (미국의소리)**

- 미국 정부는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웹비어 씨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석방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의 한 관리가 밝힘.
- 이 관리의 28일 'VOA'에 북한주재 스웨덴 대사가 이 문제와 관련해 북한 관리들과 만났다는 보도를 알고 있다며 이렇게 말함.
- 한편 평양주재 스웨덴 대사관은 26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외무성 국장이 북한 주재 스웨덴 대사를 만나 억류 외국인 문제를 논의했다는 조선중앙통신 보도와 관련해 현재로선 추가로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밝힘.

■ **“한국 NGO, 北인권피해자 매장지 보고서 발간 추진”(연합뉴스)**

- 국내 인권단체가 북한에서 인권유린으로 사망한 피해자들의 집단매장지 관련 보고서 발간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9일 보도함.
- 북한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위킹그룹은 지난해 9월부터 탈북자 277명에 대한 심층 인터뷰와 위성사진 등을 토대로 집단매장지로 의심되는 12곳을 파악했다고 주장하면서 내년 4월 또는 5월 첫 번째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힘.
- 이 단체 이영환 대표 겸 사무국장은 “(북한의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집단 매장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리기 위한 자료를 수치화해서 제공할 것”이라고 말함.

2016. 11. 30.

■ **부시 “북한, 사라지는 폭정의 마지막 요새…인권개선 촉구”(연합뉴스)**

- 조지 W 부시(아들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지구상에서 사라져 가는 마지막 냉전 국가 중 하나로 규정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촉구함.
- 부시 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주 델러스에 있는 자신의 부시 대통령 센터에서 열린 ‘어둠을 관통하는 빛 : 북한자유포럼’ 연설에서 북한의 위협

- 을 경고함과 동시에 북한 주민의 인권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함.
- 부시 전 대통령은 또 북한 주민이 압제와 기근, 폭력으로 오랫동안 고통받아왔다면 서 신이 인간에게 준 자유를 향한 그들의 희망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의해 말살돼서는 안 된다고 힘줘 말함.

2016. 12. 1.

■ 유엔 전문가그룹 “北 인권피해자 증언 이메일로 접수”(연합뉴스)

- 유엔 북한인권 전문가그룹이 북한으로부터 인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증언을 이달 중순까지 이메일로 접수한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 보도함.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산하 북한인권독립전문가그룹의 사라 후세인 변호사는 RF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 방안 등에 대한 추가 증언이나 제안이 있으면 누구든지 12월 14일까지 이메일(gie-dprk@ohchr.org)로 연락해달라”고 말함.
- 후세인 변호사는 “북한의 인권책임자 처벌 등 북한 인권유린과 관련한 진실과 정의를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독립전문가그룹에 주어진 임무”라며 지난 달 말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탈북자 등과 인터뷰했다고 설명함.

■ 美북한인권위 “北, 정치범수용소 ‘25호 청진관리소’ 계속 증설”(연합뉴스)

-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 ‘25호 청진관리소’를 계속 증설하는 정황이 포착됨.
- 미국 비정부기구 북한인권위원회(HRNK)는 2003년 1월 18일부터 지난해 9월 21일까지 함경북도 청진시에 있는 25호 청진관리소를 촬영한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를 29일(현지시간) 공개함.
- HRNK는 위성사진을 토대로 이 기간 주 경제활동이 농업과 경공업인 25호 청진관리소가 시설을 확장했다고 분석함.

2016. 12. 2.

■ 유엔서 북한인권 토론회…“국제사회, 北인권문제 지속 압박해야”(연합뉴스)

- 유엔과 주요 회원국 정부의 북한 인권 담당 인사들이 1일(현지시간) 오전 뉴욕 유엔본부에서 토론회를 가짐.
- 현재 북한 인권상황을 진단하고 국제사회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이 자리에는 100여 명의 각국 외교관과 시민사회단체 인사가 참석하는 등 큰 호응을 얻음.

- 질리언 버드 유엔 주재 호주대표부 대사의 사회로 이정훈 북한 인권 국제협력대사, 가토 가쓰노부 일본 납치문제담당상,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 시나 폴슨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장이 토론자로 참석함.

2. 북한인권 내부동향

2016. 11. 28.

■ 北, 독재자 인권유린 단죄하는 ICC 비난…“서방의 꼭두각시”(연합뉴스)

- 북한은 28일 독재자의 인권유린 등을 단죄하는 국제 법정인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서방의 꼭두각시”라고 비난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국제형사재판소가 세계도처에서 비난과 배척을 받고 있다”면서 ICC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 나라들의 반인륜범죄와 인권유린 행위는 모른척하면서 아프리카인들을 표적으로 삼는다고 주장함.
- 신문은 이어 부룬디와 남아프리카공화국, 감비아 등이 탈퇴를 선언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제형사재판소의 신용과 영향력이 크게 떨어져 자기의 존재를 끝마치게 될 수 있다”고 덧붙임.

3. 북한인권 남한동향

2016. 11. 28.

■ 북한인권기록센터, 탈북민 대상 시범조사(연합뉴스)

-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오는 29일 경기도 안성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탈북민을 대상으로 북한인권실태 시범조사를 할 예정임.
- 28일 통일부에 따르면 이번 시범조사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북한인권 실태조사를 앞두고 북한인권기록센터가 개발한 설문서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효과적인 조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함.
- 기록센터 관계자는 “이번 시범조사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 문항과 조사 방법을 확정하고, 12월 중 정착지원 시설에 입소하는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체계적인 인권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함.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2016. 12. 1.

■ **“탈북민 30여명, 중국 공안에 체포돼 복송 위기”(연합뉴스)**

- 탈북민 30여명이 최근 중국에서 공안에 체포돼 복송 위기에 처해 있다고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가 1일 보도함.
- 중국의 한 대북 소식통은 데일리NK에 “지난달 25일 중국 랴오닝성 선양에서 5세 미만 어린이를 포함해 3개 그룹으로 움직이던 30여 명의 탈북민이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면서 “이들은 국경도시 단둥으로 이송돼 조만간 복송될 것 같다”고 밝힘.
- 소식통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는 금을 탈북민 복송 대가로 중국 측에 지불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중국 국경지역에는 포상금 전단과 플래카드가 나붙어 있다”고 전함.

5. 대북지원

2016. 11. 29.

■ **“지난달 식량지원 늘면서 北주민 식량배급량 올 들어 최대”(연합뉴스)**

- 지난달 대북식량지원 규모가 올해 들어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1인당 하루 380g의 식량을 배급받았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세계식량계획(WFP)을 인용해 29일 보도함.
- WFP는 최근 발표한 북한 국가보고서에서 “지난달 북한 취약계층 82만4천여 명에게 3천567t의 식량을 지원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북한 당국은 주민 한 명당 하루 380g의 식량을 배급했다고 소개함.
- 하지만 이 같은 배급량은 유엔의 1인당 하루 최소 권장량 600g은 물론, 북한 당국이 목표로 하는 1인당 하루 배급량 570g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WFP는 설명함.